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1. 대륙법계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 17세기 경찰국가시대에는 국가작용의 분화현상이 나타나 경찰개념이 군사·재정·사법·외교를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하였다.
- ㉡ 1795년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제16조는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라고 규정하였다.
- ㉢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 ㉣ 대륙법계 경찰의 업무범위는 국정전반→내무행정→위험방지→보안경찰 순으로 변화하였다.

[정답] ㉢

[해설] ㉢이 적절하지 않다.

- ㉢ 틀림. 범죄의 예방과 검거 등 보안경찰 이외의 산업, 건축, 영업, (~~풍속경찰~~) 등의 경찰사무를 다른 행정관청의 분장사무로 이관하는 현상을 '비경찰화'라고 한다.
- ㉠㉡㉣ 옳음.

2. 경찰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경감]

- ㉠ 삼권분립사상에 기초하여 분류할 때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할 때 예방경찰은 경찰상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작용으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의 보호'가 이에 해당한다.
- ㉢ 자치경찰제도는 각 지방특성에 적합한 경찰행정이 가능하지만, 국가경찰제도에 비해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
- ㉣ 국가경찰제도는 경찰업무집행의 통일을 기할 수 있으나, 정부의 특정정책 수행에 이용되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날 우려가 있다.

- ㉠ ㉠㉡ ㉡ ㉠㉢ ㉢ ㉡㉣ ㉣ ㉢㉣

[정답] ㉡

[해설] ㉠㉢이 옳다.

㉠㉢ 옳음.

- ㉡ 틀림.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된다. 예방경찰은 진압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라 분류한 것이므로 옳지 않다.
- ㉣ 틀림. 관료화되어 국민을 위한 봉사가 저해될 수 있다는 가설은 국가경찰제도의 단점에 해당한다.

■ 경찰의 분류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목적에 따른 구분 (3권 분립사상)	행정경찰	사법경찰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	보안경찰	협회의 행정경찰
경찰권 발동시점에 따른 구분	예방경찰	진압경찰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	국가경찰	자치경찰
위해정도와 적용법규 및 담당기관에 따른 구분	평시경찰	비상경찰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구분	질서경찰	봉사경찰

3. 경찰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으로 볼 때 경찰관이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 해당한다.
- ②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으로 '소외'는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 ③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④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비진정성의 조장'은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정답] ①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 ① 옳음.
- ② 틀림. 전문직이 되는 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한다는 것은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 중 차별에 해당한다.
- ③ 틀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대한 이의제기와 관련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틀림.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은 '최소주의 위험'에 관한 내용이다.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누구든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③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정답] ④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 ① 옳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 ② 옳음. (동법 제7조 ①)
- ③ 옳음. (동법 제22조 ② 제1호)
- ④ 틀림.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②)

5. 갑오개혁 이후 한국 경찰의 역사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1894년에 제정된 행정경찰장정은 일본의 행정경찰규칙(1875년)과 위경죄측결례(1885년)를 혼합하여 만든 한국경찰 최초의 경찰작용법으로 영업·시장·회사 및 소방·위생, 결사·집회, 신문잡지·도서 등 광범위한 영역의 사무가 포함되었다.
- ②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업무영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회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 ③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정보경찰 등의 사무가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 ④ 최규식 경무관은 19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천은사, 선운사 등 우리 문화재를 수호한 문화경찰의 표본이다.

[정답] ①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①이다.

- ① 옳음.
- ② 틀림.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지만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계를 강화 하였다.
- ③ 틀림. 정보업무를 담당할 사찰과(현재의 정보과에 해당)는 신설되었다.
- ④ 틀림.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천은사, 선운사 등 우리 문화재를 수호한 문화경찰의 표상은 차일혁경무관 이다.

6.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짐으로써 재판규범이 된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② 법규명령의 한계로 행정권에 대한 입법권의 일반적·포괄적 위임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국회 전속적 법률사항의 위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 ③ 행정규칙의 종류로는 고시·훈령·예규·일일명령 등이 있다.
- ④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이 법률의 수권 없이 권한 범위 내에서 만든 일반적·추상적 명령을 말하며 대내적 구속력을 갖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이를 위반하면 반드시 위법이 된다.

[정답] ④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 이다.

- ④ 틀림. 대내적으로는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나 내부지침'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그에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행정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09두7967)

①②③ 옳음.

7. 행정관청의 권한의 위임과 대리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19'경감]

- ㉠ 권한의 위임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권한의 전부를 이전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위임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 ㉡ 권한의 위임은 수임관청에 권한이 이전되므로 수임관청에 효과가 귀속되나, 권한의 대리는 직무의 대행에 불과하므로 임의대리든 법정대리든 피대리관청에 효과가 귀속된다.
- ㉢ 원칙적으로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불가능하나, 법정대리는 권한의 전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복대리가 가능하다.
- ㉤ 임의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대리기관의 행위에 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나, 법정대리의 경우 피대리관청은 원칙적으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 | | | |
|--------|------|------|------|
| ① ㉠(O) | ㉡(O) | ㉢(X) | ㉤(O) |
| ② ㉠(X) | ㉡(O) | ㉢(O) | ㉤(X) |
| ③ ㉠(X) | ㉡(O) | ㉢(O) | ㉤(O) |
| ④ ㉠(X) | ㉡(X) | ㉢(O) | ㉤(X) |

[정답] ③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해설] 옳고 그름의 표시가 바르게 된 것은 ③ 이다.

㉠틀림. 권한의 전부를 위임 하는 것은 사실상 위임관청의 권한의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위임관청의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위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 옳음.

■ 대리와 위임

구분	대리		위임
	임의대리	법정대리	
권한의 이전 여부	불이전		이전
법적근거	불요	필요	필요
권한의 범위	일부	전부	일부
효과의 귀속	피대리관청	피대리관청	수임청
책임의 귀속 (행정소송의 피고)	일반적으로 피대리관청		수임청
지휘·감독	가능	불가	가능
복대리·재위임	불가	가능	가능
상대방	주로 피대리관청의 보조기관		주로 하급관청

8. 경찰공무원의 「국가공무원법」상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로서 직무전념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법령준수의 의무, 종교중립의 의무, 비밀엄수의 의무, 복종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 ② 복종의 의무와 관련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하여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④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소속 상관이 종교중립의 의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가장 적절한 것은 ③이다.

- ① 틀림. 비밀엄수의 의무는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상의 의무에 해당한다.(국가공무원법 제60조)
- ② 틀림. 국가공무원법이 아니라 경찰법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묻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경찰법 제24조①)
- ③ 옳음. (국가공무원법 제64조①)
- ④ 틀림.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2에 다음과 같이 규정 하였다.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상관이 이에 위배되는 직무상 명령을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59조의2)

■ 경찰공무원의 의무

의무	국가 공무원법	선서 의무(제55조), 성실 의무(제56조)	일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제65조) 비밀엄수 의무(제60조) 품위유지 의무(제63조) 청렴 의무(제61조) 영예 등의 제한(제62조) 집단행위 금지 의무(제66조)	신분상 의무
		법령준수 의무(제56조), 종교중립 의무(제59조의2), 친절공정 의무(제59조), 복종의 의무(제57조), 직무전념 의무(제58조, 제64조)★ 직장이탈금지(제58조) 영리업무종사금지(제64조) 겸직금지(제64조)	직무상 의무
	경찰 공무원법	제복착용 의무(제20조1항), 거짓보고 및 통보금지 의무(제18조 제1항), 지휘권남용금지 의무(제19조), ☆ 직무유기금지 의무(제19조)★	
	경찰 공무원 복무규정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제9조)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금지(제10조)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 금지(제8조)☆	신분상 의무
	공직자 윤리법	재산등록 · 공개 의무(제3조, 제10조)	

9.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중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와 징계등 의결 요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강등 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1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 ③ 감독자의 부임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 ④ 행위자가 간첩 또는 사회이목을 집중시킨 중요사건의 범인을 검거한 공로가 있을 때나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직무상의 절차를 충실히 이행한 때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정답] ②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해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②이다.

- ② 틀림. ㉠ 강등 징계시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국가공무원법 제80조 ①) 금품 또는 향응 수수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임용을 할 수 없다.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제6조 ① 제2호가목)
- ㉡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은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간 승진임용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품 또는 향응 수수 등의 정한 사유에 한해서는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임용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24개월이 옳다.
- ③ 옳음.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①)
- ④ 옳음. 감독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⑤ 옳음.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10. 소청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소청심사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는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 ② 경찰공무원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 ③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때 필요하면 검증·감정, 그 밖의 사실조사를 하거나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④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는 비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④이다.

- ① 옳음. 소청심사란 징계처분 기타 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필요적으로 거쳐야 하는 인사에 관한 행정심판의 일종이다.
- ② 옳음. 처분,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不作為)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①)
- ③ 옳음. (동법 제12조 ②)
- ④ 틀림.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제1호(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및 제2호(대학에서 행정학·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동법 제10조 ①)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11.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경찰관은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 ②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호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즉시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 ④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질문을 하는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면 되고(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④)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알리는 것은 질문 하는 경우가 아니라 동행을 요구한때 이다.(동법 제3조 ⑤)
- ② 틀림.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구호대상자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동법 제4조 ①)
- ③ 틀림.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目前)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동법 제6조)
- ④ 옳음. (동법 제10조의 2)

12.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대한 ㉠부터 ㉣까지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9'경감]

제11조의3(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 ㉠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 ㉡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②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는 ㉠ 위원장 1명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③

[해설]

㉠ 틀림.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①)

㉡ 옳음. (동법 제11조의3 ① 제2호)

㉢ 옳음. (동법 제11조의3 ① 제3호)

㉣ 틀림. 보상금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법 제11조의3 ③)

13. 공직분류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① 계급제는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으로 널리 일반적 교양·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여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지므로 공무원이 보다 종합적·신축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②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나,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불명확하다는 단점이 있다.

③ 계급제는 충원방식에서 폐쇄형을 채택하여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어 인사배치의 신축성이 있다.

④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직무분석을 통한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편이다.

[정답] ①

[해설]

① 옳음.

② 틀림. 직위분류제는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유용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다.

③ 틀림. 계급제는 충원방식에서 폐쇄형을 채택하여 인사배치의 신축성·융통성이 있으나 직위분류제는 개방형을 채택하고 있어 비신축적·비융통적이다.

④ 틀림.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결정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직무분석을 통한 이해력이 넓어져 기관 간의 횡적 협조가 용이한 것은 계급제의 장점이다.

■ 공직의 분류방식

구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	-----	-------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의의	특정인이 획득·보유하고 있는 자격·신분·학력을 중심으로 계급을 만드는 제도	특정직위에 내재하고 있는 직무의 성질·종류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복잡도 등에 따라 직군·직렬·직류·직급으로 직위를 분류하는 제도
분류기준	인간의 능력·신분·자격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
채택국가	영국·독일·일본 등	미국·캐나다 등
충원방식	폐쇄적 신규인원 충원은 최하위에서 승진은 재직자 간의 승진임용에 의존	개방적 모든 계층에서 신규채용이 허용
인사배치	신축적·융통적	비신축적·비용통적
신분보장	강함 : 순환보직을 통한 신분보장	약함 : 직위와 생존을 같이함
장점	신분보장과 함께 장기간에 걸쳐 능력이 키워 치므로 조직전체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이해력을 갖게 되어 ① 일반행정가 양성에 유리하고 ② 기관간 횡적 조정·협조가 용이하다. 폐쇄형 충원방식으로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③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이 용이함.	시험·채용·전직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하여 ① 인사행정의 합리화를 기한다.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보수 의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② 보수결정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다.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③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한다.
단점	① 업무와 보수간 형평성이 결여되어 보수 체계가 비합리적이다. ② 한 가지 일을 깊이 있게 하는 전문행정가 양성이 곤란하다. ③ 권한·책임한계의 불명확	① 유능한 일반행정가 확보가 곤란하다. ② 인사배치의 비용통성·비신축성 ③ 신분보장의 미흡 ④ 전문화에 따른 수평적 횡적 협조·조정이 곤란하다.
양자의 관계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닌 서로의 결점을 시정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	
우리나라	계급제를 기반으로 직위분류제 요소를 가미한 혼합형 상태로 운용	

14. 조직 내부 갈등의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②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을 완화하거나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갈등의 장기적 대응을 위해서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있다.
- ④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 전체적인 업무처리과정의 조정과 통합이 바람직하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정답] ④

[해설]

①②③ 옳음.

- ④ 틀림. 갈등의 원인이 세분화된 업무처리에 있다면 업무처리과정을 통합한다든지 연결하는 장치나 대화채널을 확보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으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관리자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15.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경찰관이 포상휴가를 가는 것보다 유능한 경찰관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범인을 검거하였다면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것이다.
- ② 매슬로우는 5단계 기본욕구가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루고 있어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된다고 보았다.
- ③ 소속 직원들 간 인간관계의 개선, 공무원 단체의 활용, 고충처리 상담, 적절한 휴양제도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 ④ 경찰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를 마련하고 권한의 위임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정답] ②

[해설]

- ① 틀림. 경찰관이 포상휴가를 가는 것보다 유능한 경찰관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어서 열심히 범인을 검거하였다면 존경의 욕구를 충족하고 싶은 것이다.
- ② 옳음.
- ③ 틀림. 사회적 욕구는 애정의 욕구라고도 하며 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은 소속 직원들 간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이다. 공무원 단체의 활용은 자아실현의 욕구에 대한 충족방안이고 적절한 휴양제도는 생리적욕구 충족방안에 해당한다.
- ④ 틀림. 경찰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제도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에 해당하고 권한의 위임과 참여를 확대는 존경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 매슬로우(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생리적 욕구	내용	가장 원초적인 욕구 의식,주와 성욕
	충족방안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안전의 욕구	내용	위험, 위협,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
	충족방안	신분보장, 연금제도
사회적 욕구	내용	친교를 맺고 원하는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
	충족방안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존경욕구	내용	명예, 권력, 지위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
	충족방안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아실현 욕구	내용	자기개발, 자기완성, 성취감의 충족 등 자아완성의 욕구
	충족방안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 단체활동

16.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품목별 예산제도는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세출예산의 금액을 분류하는 통제지향적 제도로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 예산제도로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하고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에 적용이 어렵다.
- ③ 영기준 예산제도는 예산편성 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폐단을 탈피하기 위한 예산제도이다.
- ④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로 행정부가 예산편성을 통해 정하며 중요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정답] ③

[해설]

- ① 틀림. 품목별 예산제도는 회계책임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하는 단점이 있다.
- ② 틀림.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가 곤란한 것은 품목별예산제도의 단점에 해당한다.
- ③ 옳음.
- ④ 틀림. 일몰법은 특정의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게 하는 예산제도로 입법부가 예산편성을 통해 정하며 중요사업에 대해 적용된다.

▣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① 지출의 대상·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 분류 ② 통제지향적이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기술. ③ 회계 집행내용과 책임의 소재가 명확. ④ 인사행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 ⑤ 기능의 중복을 피하기 곤란.
성과주의 예산제도	① 정부의 기능·활동·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업무량=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제도. ② 일반국민이 정부사업에 대한 이해가 용이. ③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적용이 어려움.
계획 예산제도	① 장기적인 기본계획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세워서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예산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예산제도.
영기준	①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매년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예산제도	②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적으로 예산액을 책정하는 폐단을 시정하려는 목적에서 유래
자본 예산제도	① 정부예산을 경상지출과 자본지출로 나누어 경상지출은 경상 수입으로 충당하여 균형을 맞추고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하여 불균형예산을 편성.
일몰법	① 특정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이 지나면 의무적·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규정한 법률.

17. 경찰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다.
- ②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로 예산 확정 전에는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경찰관서의 유지·운영 등 기본경비에는 사용할 수 없다.
- ③ 관서운영경비는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할 수 없으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를 금융회사등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확정되면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정답] ③

[해설]

- ① 틀림.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확정된 후에 새롭게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이다.
- ② 틀림.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의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하는 제도로 예산 확정 전에는 경찰공무원의 보수와 경찰관서의 유지·운영 등 기본경비에는 사용할 수 있다.
- ③ 옳음.
- ④ 틀림. 예산의 집행은 예산의 배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확정되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18.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비밀이란 그 내용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 기밀로서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I 급, II 급, III 급 비밀로 구분된다.
- ②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II 급 비밀로 하며,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을 III 급 비밀로 한다.
- ③ 비밀은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아니 되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 ④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정답] ④

[해설]

①② 옳음. (보안업무규정 제4조)

③ 옳음. (동규정 제12조 ②③)

④ 틀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25조 ②)

1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서면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여야 한다.
- ④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동법 제3조)
- ② 틀림.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동법 제11조 ③)
- ③ 틀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0조 ①)
- ④ 옳음. (동법 제9조 ① 제3호)

20. 「행정절차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등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④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그 상대방에게 그 행정지도의 취지 및 내용과 신분을 밝혀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청문을 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2조 ③)
- ② 옳음. (동법 제21조 ②)
- ③ 옳음. (동법 제48조 ①)
- ④ 옳음. (동법 제49조 ①, 제50조)

21.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억제이론'은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며, 범죄의 동기나 원인, 사회적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 ② '일상활동이론'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한다.
- ③ '합리적 선택이론'은 인간이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합리적인 인간관을 전제로 하므로 비결정론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있다.
- ④ '치료 및 갱생이론'은 비용이 많이 들고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 예방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틀림.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범죄예방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집합효율성이론이다.
- ①③④ 옳음.

2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근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 ②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
- ③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 ④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정답] ②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해설]

- ① 옳음.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③ 제2호)
- ② 틀림. 비상 및 작전사태 등 발생시 차량, 선박 등의 통행 통제는 경계근무에 해당한다.(동규칙 제26조 ② 제1호)
- ③ 옳음. (동규칙 제25조 ③ 제4호)
- ④ 옳음. (동규칙 제25조 ③ 제6호)

■ 지역경찰의 근무종류와 업무

순찰근무 (규칙25조)	1. 순찰근무는 그 수단에 따라 112 순찰, 방범오토바이 순찰, 자전거 순찰 및 도보 순찰 등으로 구분한다. 2. 112 순찰근무 및 야간 순찰근무는 반드시 2인 이상 합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지정된 근무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주민여론 및 범죄정보 수집 ②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③ 범죄 예방 및 위험발생 방지 활동 ④ 경찰사범의 단속 및 검거 ⑤ 경찰방문 및 방법진단 ⑥ 통행인 및 차량에 대한 검문검색 등
------------------------	--

2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24시간 내에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포함)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업무에 관계없이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 ④ '아동등'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과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①)
- ② 틀림.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②)
- ③ 틀림.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등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경찰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신고체제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6조 ①)

④ 옳음. (동법 제2조 제1호)

24. 다음 중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모두 고른 것은? [19'경감]

-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소극장업
 ㉣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 ① ㉠㉡ ② ㉠㉢ ③ ㉡㉢ ④ ㉡㉣

[정답] ①

[해설]

- ① 옳음.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호 가목 2))
 ② 옳음. (동법 제2조 제5호 가목 6))
 ③ 틀림.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동법 제2조 제5호 나목 4))
 ④ 틀림. 청소년고용금지업소 (동법 제2조 제5호 나목 6))

■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청소년고용금지업소
1)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사행행위영업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비디오물감상실업·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화방, 화상대화방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9)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가. 숙박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과 「농어촌정비법」 또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숙박시설에 의한 숙박업은 제외한다. 나. 목욕장업 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개별실(個別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다. 이용업.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한 남자 청소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식품접객업 중 가. 휴게음식점영업으로서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 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 가. 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일 것 나. 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일 것 다.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10)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경마가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11) 「경륜·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외매장(경륜·경정이 개최되는 날에 한정한다)	태로 운영되는 영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비디오물소극장업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은 제외한다. 6) 회비 등을 받거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7)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 등 청소년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가.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업일 것 나. 외관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 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 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를 요구할 것이 우려되는 영업일 것
--	--

25.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 ②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 ③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④ 위 ③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형사소송법 제216조 ① 제2호)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② 옳음. (동법 제216조 ③)
- ③ 옳음. (동법 제217조 ①)
- ④ 틀림. 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어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압수물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동법 제217조 ②)

26.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사건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우편물 검열은 통신제한조치에 해당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할 경우에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특히 급속을 요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 후 지체없이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②)
- ② 옳음.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통신제한 조치라 한다.(동법 제3조 ②)
- ③ 옳음. (동법 제8조 ②)
- ④ 옳음. (동법 제8조 ③)

27.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경찰청장은 수형인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법원이 무죄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에 대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살인죄를 범하여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정답] ②

[해설]

- ① 틀림. 검찰총장은 수형인등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 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 ② 옳음.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하지만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동법 제13조 ② 제2호 단서)
- ③ 틀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 ④ 틀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은 구속된 피의자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라 보호구속된 치료감호대상자(이하 "구속피의자등"이라 한다)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28. 다음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역경찰관이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19'경감]

- ① 甲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甲에게 사기죄를 범한 경우
- ② 乙의 시어머니가 乙의 아들을 약취한 경우
- ③ 丙과 같이 살고 있는 사촌동생이 丙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④ 丁의 배우자의 지인이 丁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정답] ③

[해설]

- ① 틀림.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는 포함되지만 사기죄는 가정폭력 해당범죄가 아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 ② 틀림. 약취는 가정폭력 해당범죄가 아니다.(동법 제2조 제3호)
- ③ 옳음. 동거하는 친족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며 명예훼손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동법 제2조 제2호, 3호)
- ④ 틀림. 지인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2호)

2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②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 ③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의 상담 및 교육 위탁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④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정답] ②

[해설]

① 옳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① 제2호)

② 틀림.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 했을 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응급조치 내용이다. (동법 제12조 ① 제3호)

③ 옳음. (동법 제19조 ① 제5호)

④ 옳음. (동법 제19조 ① 제4호)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임시조치

사법경찰관리등의 응급조치	판사의 임시조치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30.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복합기능적 활동-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의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의 경계·예방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② 현상유지적 활동-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태적·소극적인 질서유지가 아닌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한 동태적·적극적인 의미의 유지작용이다.
- ③ 즉시적(즉응적) 활동- 경비상황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비사태에 대한 기한을 정하여 진압할 수 없으며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조기에 제압한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④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긴급하고 신속한 경비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야 한다는 의미로 폭동의 진압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휘관의 신속한 결단과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정답] ④

[해설]

①②③ 옳음.

- ④ 틀림. 지휘관을 한 사람만 두어야 한다는 것은 조직운영의 원리 중 지휘관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내용이므로 옳지 않다. 경비경찰은 하향적 명령에 의한 활동이다. 따라서 부대원의 재량은 상대적으로 적고 명령에 의한 활동의 책임은 지휘관이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31.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경찰관서 피해복구 업무 및 자체 경비는 경비국의 업무이다.
②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관심단계·주의단계·경계단계·심각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경계단계부터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③ 경비국장은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재난상황실은 총괄반·대책반·지원반·홍보반·연락반으로 근무반을 편성한다.
④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틀림. 경찰관서 피해복구 업무 및 자체 경비는 경무인사기획관의 업무이다.(경찰 재난관리 규칙 제4조 ① 제3호 '다'목.)
② 틀림.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심각단계에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경비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동규칙 제9조 ② 제4호)
③ 옳음.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경비국장은 위기관리센터에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동규칙 제9조 ①) 필요시 경비국장은 관련 국·관 및 지방청 소속 직원을 지원받아 재난상황실의 근무반을 총괄반·대책반·지원반·홍보반·연락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동규칙 제10조 ②)
④ 틀림.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동규칙 제9조 ② 제2호)

32. 「통합방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①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을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 ③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합동참모의장이 된다.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에는 인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에게 대피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 ① 옳음. (통합방위법 제2조 제6호)
- ② 틀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병종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즉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통합방위사태의 선포를 건의하여야 한다. (동법 제12조 ② 제2호)
- ③ 옳음. (동법 제4조 ②, 제8조 ②)
- ④ 옳음. (동법 제17조 ①)

■ 통합방위사태의 선포

사태유형		건의권자	선포권자
갑		국방부장관	대통령
을, 병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합대사령관	시·도지사
2 이상	을	국방부장관	대통령
	병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통령

33. 교통사고에 대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신호위반의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하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 ③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④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과 관련하여,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한정된다.

[정답] ④

[해설]

- ① 옳음. 신호위반을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그 신호위반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다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6도4322)
- ② 옳음. 교통사고 피해자가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사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치상 후 도주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08도1339)
- ③ 옳음.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8도7143)
- ④ 틀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법원 2004도3600)

34. 정보요구의 방법 중 첩보기본요소(EEI)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첩보기본요소(EEI)에 의한다.
- ②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 ③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집할 사항이다.
- ④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정답] ①

[해설]

- ① 틀림.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특별첩보요구(SRI)에 의한다
- ②③④ 옳음. 첩보기본요소(EEI)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정보요구의 방법

PNIO (국가정보목표 우선순위)	① 국가안전보장이나 정책에 관련되는 국가정보목표의 우선순위로서, 정부에서 기획된 연간 기본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목표로 하여 선정하는 경우 ② 국가의 전 정보기관 활동의 기본방침이고, 특히 경찰청이 정보수집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이 된다.
EEI (정보기본요소)	① 각 정보부서에 맡고 있는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일반적·포괄적 정보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사전에 반드시 정보수집요구계획서를 작성하며, 해당부서의 정보활동을 위한 일반지침이 된다.
SRI (특별정보요구)	① 어떤 수시적 돌발상황의 해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임시적·단편적·지역적인 특수사건을 단기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구되는 첩보 ② 정보기관의 활동은 주로 특별정보요구(SRI)에 의한다
OIR (기타정보요구)	정세의 변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책상 수정이 요구되거나 이를 위한 자료가 절실히 요구되는 경우 PNIO에 우선하여 충족시키기 위한 정보목표

35. 정보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견문보고서는 경찰관이 공·사생활을 하면서 보고 들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 분야에 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기술한 보고서를 말한다.
- ② 정보상황보고서는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③ 정책정보보고서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책을 보고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정보보고이다.
- ④ 정보판단서는 관련 견문과 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지휘관으로 하여금 상황에 대한 조치를 요하게 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정답] ②

[해설]

- ② 틀림. **중요상황보고서**는 매일 전국의 사회갈등이나 집회시위 상황을 정리하여 그 다음 날 아침에 경찰 내부와 정부 각 기관에 전파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 ①③④ 옳음.

3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집회'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집회·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최대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
- ③ 신고장소가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 및 군사시설, 상가밀집지역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나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옥외집회 및 시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정답] ④

[해설]

- ① 틀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목적, 시위에 관한 정의, 같은 법 제3조 이하에서 옥외집회를 시위와 동렬에서 보장 및 규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이 보장 및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도3014)
- ② 틀림. 집회·시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 ③ 틀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와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주변 지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은 집회 및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 통고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동법 제8조 ⑤)
- ④ 옳음. (동법 제7조 ①)

37. 「국가보안법」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고의범만 처벌하며,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②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동법의 죄를 범한 자가 타인이 동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 ③ 검사는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으며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없다.
- ④ 편의제공죄나 찬양·고무죄 등 「형법」상 중범의 성격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 독립된 범죄로 처벌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옳음. 종래에는 불고지죄와 특수 직무유기 같은 진정 부작위범을 제외한 예비, 음모, 미수를 모두 처벌하였지만 91년 8차 개정 시에 일부범죄의 예비, 음모, 미수의 처벌 규정이 삭제되었음을 참고.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 ② 옳음. (국가보안법 제16조)
- ③ 틀림.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④)
- ④ 옳음. (동법 제7조, 제9조)

38.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 ② 피보안관찰자는 국외여행 또는 7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 수사신고를 해야 한다.
-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 ④ '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①

[해설]

- ① 옳음. (보안관찰법 제14조 ①)
- ② 틀림. 피보안관찰자가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외여행 또는 **10일 이상** 주거를 이탈하여 여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거주예정지, 여행예정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구대·파출소장을 거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18조 ④)
- ③ 틀림.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하고(동법 제5조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동법 제5조 ②)
- ④ 틀림.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급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동법 제3조)

39. 다문화 사회의 접근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경감]

- ① 급진적 다문화주의-다문화주의는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되며,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와 결부되어 이해된다.
- ② 동화주의-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가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생활에서는 주류 사회의 문화·언어·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 ③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의 절충적 형태로서 다문화주의를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다.
- ④ 다원주의-소수집단이 자결(self-determination)의 원칙을 내세워 문화적 공존을 넘어서는 소수민족 집단만의 공동체 건설을 지향한다.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이다.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정답] ④

[해설]

①②③ 옳음.

④ 틀림. 급진적 다문화주의에 대한 내용이다.

■ 다문화사회의 접근 유형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동화주의)	①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참여를 위해 기회평등을 보장 ② 사회통합을 이룩하기 위해 국민국가 내부의 문화적 다양성을 허용하고, 소수 인종 집단 고유의 문화와 가치를 인정하지만, 시민생활이나 공적생활에서는 주류사회의 문화, 언어, 사회습관에 따를 것을 요구한다.
급진적 다문화주의	① '차이에 대한 권리'로 해석 ② 주류 사회의 양식을 부정하고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소수민족에 의한 문화주의를 의미한다. ③ 미국에서의 흑인과 원주민에 의한 격리주의 운동이 대표적이다.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 (다원주의)	① 결과에 있어서의 평등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② 소수집단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적·법적 원조를 한다.

40.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경감]

- ①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외교부장관은 범죄인 인도조약의 존재 여부, 상호보증 여부, 인도대상범죄 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한다.
- ④ 외교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③

[해설]

- ① 틀림. 대한민국의 주권, 국가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상 임의적 제한 사유이다. 범죄인 인도법에 관한 내용을 묻는 것임에 유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6조 제1호)
- ② 틀림.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

【경찰실무종합】 19' (경감)

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범죄인 인도법 제7조 제4호) - 절대적 인도거절사유에 해당.

③ 옳음. (동법 제11조)

④ 틀림. 법무부장관은 인도조약 또는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할 수 없거나 인도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